

문희상 의장 “목표는 특활비 폐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대명천지에 깔깔한 돈, 쌌짓돈이라는 말 자체 있어선 안돼” 다른 국가기관과 논의·여야간 운영소위내 결론 등 제도개선 절차 2가지도 제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목표는 특활비 폐지,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명천지에 깔깔한 돈, 쌌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다른 국가기관과 논의 ▲여야간 운영소위내 결론 등 제도개선 절차 2가지도 제시했다.

문 의장은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00분의 1을 국회가 쓴다. 그러면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체 특활비 개선과 국회 특활비 개선 논의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특활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야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이것(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국회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지를 지켜보고 거

기에 대해 전체 국회의 입장을 빠른 시간내 정리해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 관련 추가 질의에 “기본 방향은 폐지 내지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가 전체 특활비 중 100분의 1을 쓰는데 다른 기관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박야 한다). 우리만 덮어놓고 할 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비로) 80

억원을 쓰던 것을 40억원으로 줄였다”며 “다음에 또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내 대(代)에서 반으로 줄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해서는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9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해 “금년 안에 (개혁을) 하길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이 제

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개혁과 개혁입법 두가지가 필요하다. 개혁이 안되고 촛불혁명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합치 ▲일 잘하는 국회 ▲미래 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소위원회 활성화, 법안소위 정례화 등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도 내놨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건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뒤 “특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야한다는 비례의 원칙에는 전국민이 동의한다”며 “원칙만 숙지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있다”고 했다. /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靑 “개혁 논의, 국회가 주도할 일... 靑, 현재로서 관여 계획 없어”

문희상 의장 “연말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

개혁 논의 불씨 재점화에 야권 일제히 화답

청와대는 18일 국회가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핀 것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혁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청와대가 현재로서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혁 논의 불씨를 지켰다.

문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일제히 화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념식 직후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만 해주면 금방 금물 살을 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혁 속제를

미무리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지난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많은 정치인이 개혁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SNS에 유감을 표명했다. /뉴시스

기무사 대통령 ‘독대보고’ 법령 제한 방안 추진된다

靑 “안하무인격 특권의식 부추겨” 지적

정부, 국군기무사령부령 신설 방안 논의 중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과거 기무사가 대통령과의 독대보고가 이뤄지면서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 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 독대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

기무사는 대통령 독대보고 관행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얘기가 안팎으로 흘러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무사의 쓸데없는 특권의식만 부추기는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새 기무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 /김진성 기자

기무사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무사 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지시 사항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전국 부대를 순회하며 문서와 보고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당시 계엄령 발령 훈련을 위한 문서까지 가져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를 방문해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앞으로 며칠 동안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를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SFTS 9번째 환자 발생

전주 거주 60대 여성 확진판정 도내 대학병원서 치료중

전북도, “야외활동 후 발열 등 있으면 즉시 병원 방문해야”

전북도 보건당국은 17일 도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추가 환자가 발생, 도내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 9번째 확진환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여성으로 기저질환(고혈압)이 있고 집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농장을 일구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또한 농장에는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개에 진드기가 많이 붙어있어 잡아 죽였지만, 환자 몸에서도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확인됐다.

10일 발열이 시작되어 해열제만을 복용하였다가 호전이 없어 13일 전주시내 개인병원을 방문 입원치료 중에 SFTS가 의심되어 16일 전북대병원으

로 옮겼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진드기 매개질환을 의심 환자 검체를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17일 SFTS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는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

도 보건당국은 야외활동 후 발열, 피로감 등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병원방문을 강조하고 반려동물이나 동물 사육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며 사육하는 동물과 접촉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